

농생명수도 전북의 입지 공고화

전북연구원, 경쟁력 강화·이익공유·핵심자원 확보 등 대응방안 제시

어그테크(Agtech)와 푸드테크(FoodTech)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가 있는 중소농민들의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생명수도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진성)은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북도 대응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유통·소비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농식품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잡초제거 로봇 등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와 무인자

동 딸기수확기, 무인상추재배로봇 등 '무인 농작물 재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 3D 프린터, 요리 로봇 팔 등 '조리의 자동화'와 초저온냉동냉장기술의 보급과 자율주행 운송수단의 식품배달 영역 확장 등 '농식품 유통기술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인화·수경재배 기술로 고령화와 용수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증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산 효율성 증대에 따라 중소농 쇠퇴와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심화, 대규모 자본 중심으로 농식품 독과점 산업구조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 조순현 박사는 "이러한 농식품 미

래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농생명수도 전북도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 전략품목의 설정', '출하시기 조절·에너지절약기술개발', 'U2X(Online to Offline) 플랫폼 연계' 등이 필요하며,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생산자 조직화·협동조합 강화', '대규모자본 진입 전 피해보전방안 마련', '농업법인 투자활성화' 등을 제안하였고, 핵심자원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육묘산업 육성', '초저온 냉동냉장산업 육성', '푸드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지역농식품 R&D 혁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만들기 '앞장'

전북 도민 인권지킴이단, 오늘부터 지역별 순회 워크숍 추진

전북도가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표방하고 도민 지킴이단 역량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북도민 인권 지킴이단의 역량 강화 및 인권 존중 의식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전북 일원을 순회하며 지역별 순회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150명으로 구성된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가, 대학교수, 전업주부, 자영업, 회사원, 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 인권지킴이단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대활동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한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교육 및 사례 중심 토론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실천력 향상,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어, 지난해 구성된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침해제보, 정책제안, 인권현장 견학 등 지킴이단 활동사항 분석을 통한 운영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2019년도 운영지침 안내 및 지킴이단 활동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행동·참여적 활동인 공공시설 인권 반영실태 모니터링 및 인권캠페인을 특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인권활동을 통해 공공시설 부분에서부터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정부 정책 온라인 홍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단체원)은 지방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2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인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혁신성장의 주체인 아이들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게 큰 부담이 가지 않고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의 조기정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원은 이번 과정에서 저출산 정책방향 전환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재정의 합리화 등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강과 현장학습 등을 진행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가족 중심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기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 '해의 저출산 인구대응 정책' 특강을 통해 국가·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는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위주의 정책보다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으로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원 서포터즈도 참여해 포용국가 비전과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김진성 기자



주인 바뀐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15일,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MS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을 성사시켰다. 이모솔컨설팅회사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엠과 세종공업, MS오토텍, 명신산업 등이 참여했다. 사진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설명회 개최

내일 전북지역 피해자 196명 대상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장원익, 약칭: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황전원)는 내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슴기살균제 참사 현황 및 정보제공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소개와 함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부처 담당자가 피해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인종질환, 피해자인정,

거제지환 등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민간 법률전문가를 구성하여 법률적인 상담 시간도 갖는다.

전북의 가슴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모두 196명(생존자 155명, 사망자 41명)으로, 이는 전체 피해자 6,399명 중 3%(19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전북지역 피해 신청자는 19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41명이다. 전주시 83명, 군산시 35명, 익산시 32명, 김제시 8명, 남원시 8명, 고창군 7명, 부안군 6명, 완주군 5명, 정읍시 4명, 덕진구 2명, 무주군 2명, 장수군 2명, 완산구 1명, 임실군 1명이다.

권역별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지원소위원회 황전원

소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계 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피해자들을 위해 2018년 수원(12.13)과 대전(12.19)에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년도 부산(3.15)을 시작으로 상반기 6개 주요도시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해 피해자들과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전국 1위 수성

전북도는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한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신규, 갱신)사업자가 2019년도 제1차 심사결과 25개소로 전국 1위를 수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심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의 인증신청을 받아 도 농촌융복합산업 비전과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성,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사업자로 지정하게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 제품 부착, 우수제품 유통포럼,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우수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코칭, 자금지원,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 등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유관기관(생물산업진흥원, 창조경제 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상품 품질관리 및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 원주 삼례읍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공사
2. 지중화 확정지역 : 원주 삼례읍 터미널 사거리 ~ 우석대 사거리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12월
4. 신·증설 고객의 지중공급 시행 기준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역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막다른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 7.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